



주간 통일정세

2010-3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북한서 김정일한테 ‘위대한 수령’ 호칭(9/14, 미국의 소리(VOA))**
 - 최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애하는 지도자’대신 고 김일성 주석을 지칭하던 ‘대한 수령’ 로 바꿔 부르는 것이 목격됨.
 -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한 국제 기독교선교단체 ‘오픈 도어즈’의 폴 에스타부룩 국장은 “6월까지만 해도 ‘BBC방송’ 등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한 주민과 안내원들이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로 구분해 호칭했다”면서 “이번 방북 기간 관찰해 봤더니, 김일성한테 붙였던 ‘위대한 수령’을 김정일한테 쓰고,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바꿔 불렀다”고 이 방송에 밝힘.
 - 에스타부룩 국장은 이어 “김정일한테 쓰던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후계자 김정은(김 위원장 셋째 아들)을 위한 남겨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임.
 - VOA는 그러나 에스타부룩 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호칭을 들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또 “평양 봉수교회 예배의 설교 주제도 ‘평화와 통일’이고,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 구호도 ‘평화와 통일’이었다”면서 “가는 곳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선전구호가 나타나 인상적이었다”고 말함.

- **北노동신문 ‘당 중심 유일영도체계 확립’ 촉구(9/14, 조선중앙방송)**
 - 44년만에 소집된 북한 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회를 앞두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당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촉구
 - 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당의 강화 발전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의 전도가 달려 있다”면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당 조직과 일꾼(간부)들은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
 - 신문은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 지칭)의 두리(주



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면서 “전체 당원들이 주체형의 붉은 피로 심장을 끓이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전진하는 것이 우리 당의 참모습”이라고 강조

- 이 사설은 또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이 다가오는 지금”이라는 표현을 써 14일 오전 현재 당대표자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시사
- 노동신문은 이날자 2면에도 ‘논설’을 실어 “조선노동당은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는 위대한 향도자”라고 밝힘.

● 北김일성방송대 홈페이지, “후계자 유일영도 확립해야”(9/15,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이 44년만에 소집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직영 교육기관인 ‘김일성방송대’ 홈페이지에 ‘수령 후계자’를 제대로 뽑아 ‘유일적 영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주목됨.
- 남한의 방송통신대에 해당하는 ‘김일성방송대’는 북한의 노동당 당원과 일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노동당 직영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각에서는 내각 교육위원회 산하라고 추측
- 15일 김일성방송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민족강당’을 보면 ‘수령의 후계자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이 올라옴.
- 이 글은 “수령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정치적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고, 수령의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담보”라며 우회적으로 김정은(김정일 위원장 셋째 아들)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부각시킴.
- 글은 또 “유일적 영도체제를 세우지 못하면 후계자가 아무리 준비된 인물이라 해도 오랜 기간 진통과 곡절을 겪게 된다”면서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후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후계자 중심의 유일영도체제 확립을 재차 강조
- 글은 후계자의 요건과 관련,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공헌으로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 권위와 위신을 지닌 걸출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추대해야 한다”면서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후계자를 옳게 세우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지만 후계자를 잘못 내세우면 정치적 야심가와 음모가들에게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탈취당하게 된다”고 경고

● 北당대표자회 연기…수해로 정족수 미달(9/15, 좋은벗들)

- 북한 노동당이 ‘9월 상순’에 연다고 했던 제3차 당대표자회가 수해로 인한 개회 정족수 미달로 결국 연기



- 북한 현지소식통을 인용, “14일 저녁까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당대표자회를 연기하기로 결정됐다고 한다”면서 “평양에 모여 개회를 기다리던 전국 각지의 대표자들이 15일 아침 이런 방침을 통보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연기 배경과 관련, “수해로 도로가 끊기고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상당수 지방 대표자들이 평양에 올라오지 못해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달 말쯤 당대표자회 일정을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내달 10일 ‘당 창건일’ 이전으로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단체는 “원래 이번 당대표자회는 지난 4일부터 참가자 등록을 시작해 7~8일 본회의를 갖고 그 다음날 9.9절(정권수립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짜여졌는데 계속 미뤄진 것”이라고 덧붙임.

● 北당대표자회, 결국 김정은 때문에 연기(9/16, 연합뉴스)

- 이달 상순에 열린다고 했던 북한의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북측의 공식 언급이 나오지 않아,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도 엇갈리고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번 당대표자회가 연기된 배경과 관련, 후계자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 셋째 아들)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6일 전함.
- 이 방송은 ‘북한 고위층과 연계가 가능한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달 초 평양에서 당대표자회 관련 예비회의가 열려 김정은을 공개할지 여부가 논의됐다”면서 “김정은의 공개와 관련된 당 지도기관의 재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20대인 김정은을 당내 지도급 인사로 추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본 것 같다”면서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난데다, 수해와 태풍 피해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방송에 말함.
-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 “연기 이유로는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가장 크고, 다음은 김정은의 공식 등장을 앞두고 선군정치 체제에서 어느 정도로 개혁·개방 수위를 가져갈지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 북한이 6월 하순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 방침을 공표할 때만 해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며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개혁·개방은 배척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난달 하순 김 위원장의 방중 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으로부터 개혁·개방을 주문하는 압박을 강하게 받아 ‘수위조절’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이 방송은 설명
- 북한인민해방전선은 지난 13일 양강도 국경경비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스스로 ‘후계자 자질과 품모를 더 갖추고 나서 공식석상에 나서겠다’며 당대표자회에서 추대되는 것을 거부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

● 北, 김정은 사진 당간부들에 배포(9/17,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 당국이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 사진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배포했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을 인용,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인 이달 초부터 노동신문 특집화보가 중앙당과 지방 시·도당 간부들에게 배포했다”면서 “이 화보는 대부분 김 위원장의 방중 활동 사진들로 채워졌지만 김정은 사진도 4~5장 실렸다”고 밝힘.
- 또한 “내주부터 일반 주민들도 화보를 보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김정은 사진을 일반 주민들에게 회람토록 하는 것은 조만간 열릴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등장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

■ 김정일동향

- 9/14 김정일, 러시아 ‘메드베제브’ 대통령 생일 관련 축전 발송(9/14, 중통)
- 9/16 김정일, 100살 장수자 리학녀(女, 平南 문덕군 읍 거주) 노인에게 ‘생일상’ 전달(9/16, 중방·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訪中(8/26~30) 관련 “北-中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고, 東北亞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의미있는 계기”로 평가(9/13, 중통·노동신문·평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062호, 9/1 26개 단위들에 모범준법 단위칭호 수여(9/14, 중방)
- 김일성 저작 ‘중국 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자’ 발표(1945.9.15) 65돌 즈음 “조-중 친선은 특수하고 공고한 관계”로 김정일의 이번 비공식 訪中도 ‘조-중친선 불변을 다시금 만방에 보여주었다’고 선전(9/14, 중방·중통)

나. 경제

● 北, 관세 대폭 인상…中변경무역 위축(9/1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
- 중국 연변(延邊)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최근 함경북도 일대 북한 세관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보다 배 이상 높게 적용하고 있음.
- 북한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는 연변의 한 무역상은 “종전 10t 트럭 한 대당 2만 위안(북한 돈 400만 원)가량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이 지금은 5만 위안(북한 돈 1천만 원)으로 배 이상 인상됐다”고 말함.

- 이 무역상은 “북한 세관들이 지난 두 달여 동안 ‘상부에서 검열이 나왔다’는 이유로 중국산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며 “최근 통제가 완화됐지만 관세가 너무 올라 무역상들이 북한으로 물건을 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최근 투먼(圖們) 카이산툰(開山屯)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세관을 통해 7t가량의 중국산 생필품을 들여간 북한 무역일꾼이 3만5천 위안의 관세를 물었다”며 “종전에는 1만4천 위안이면 족했다”고 말함.
- 또한, “관세뿐 아니라 북한 세관원들이 요구하는 TV나 가구 등도 장만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무역일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중국과의 변경무역도 크게 위축됐다”고 말함.
- 그는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나온 돈이 얼마 안 된다”며 “관세를 물고 나면 물건을 해갈 돈이 얼마 안 되는데다 이익을 남기려면 가격을 많이 올려 팔아야 하는데 화폐개혁 이후 경제가 악화된 북한에서 제대로 팔릴지도 의문이어서 이번엔 그냥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함.
- 그는 또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중국산 물품 반입이 크게 줄면서 최근 북한의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국가우표발행국, 김일성 생일 100돌 즈음 연재우표(소형전지 2종, 묵지 5종, 2012년 4월까지 발행) 발행(9/13, 중통)
- 北 함흥시, 용성기계연합소의 선군주철공장 건립·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 건설·2.8비날론연합기업소 주체섬유 생산 등 경제강국건설 투쟁에서 성과 이룩(9/13, 중통)
- 北 ‘봄향기’(신의주화장품공장 생산) 화장품, 전국의 백화점과 농촌 상점들에서 판매되어 주민들에게好評(9/13, 중통)
- 黃南 해주시·안악군 등지의 협동농장, 강냉이 가을걷이에서 성과 이룩(9/16, 중방)
- 北,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제작한 ‘심장수술용 봉합실 고정기’·‘고려의학진단치료기’ 등 소개(9/16, 중방)

다. 군사

● 北, 전국 규모 군사훈련 진행중(9/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당대표자회 지연으로 흐트러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전국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음.
- 방송은 다수의 북한내 소식통들을 인용, “지난 15일부터 나흘 일정



으로 특수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양강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쌍방훈련’이, 그외 지역에서는 민간대피훈련과 등화관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이어 “쌍방훈련은 특수부대가 적군으로 가장해 공장, 기업소, 국가 주요기관 건물을 습격하고, 민방위 무력이 해당 지역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특수부대는 강원도, 황해도와 북부 산간지대 사이를 이동하면서 낮은 지형의 목표물을 찾아 기습 타격하는 능력을 키우고, 민방위 부대들은 적의 침투에 실전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설명
-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대개 쌍방훈련은 겨울철에 10~15일간 한다”면서 “이처럼 가을철에 짧게 훈련하는 것은 당대표사회가 열리지 않아 민심이 흥흥해지자 주민들을 긴장시키려는 의도인 듯하다”고 말함.
- 소식통은 또 “훈련 기간 적위대원은 공장방어를, 교도대원은 특수부대 추격·소탕을, 부녀자들로 구성된 ‘3.18부대’는 부상병치료와 전투식량 전달 임무를 맡는다”면서 “이처럼 인민반 부녀자들까지 동원돼 주민 대부분이 훈련에 매달려 있는 분위기”라고 전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임의의 시각에 사이렌이 울리면 이틀분 식량을 갖고 시내에서 30~40리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아무리 정세가 긴장돼도 일손이 바쁜 가을철에 군사훈련을 한 적은 없었는데, 당국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말함.
- 방송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당대표사회 연기로 어수선해진 북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하다”고 지적

라. 사회·문화

● 北, 곤파스로 수십명 사망(9/15, 조선중앙통신)

- 이달 초 한반도를 관통한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주택 8천여 세대가 파손
- 통신은 “폭우와 강한 비바람, 산사태로 전국적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8천38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돼 많은 사람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또 “일부 지역에서 송전선이 끊어지고 수원지와 상수도망이 파괴돼 전기와 식수 공급이 중단됐으며, 교통 두절로 식량과 의약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난관이 조성됐다”고 덧붙임.
- 이밖에 250m 구간의 철길에서 6천200㎡의 노반이 무너지는 등 총 연장 66km(6만5천980m)의 철길이 태풍 피해를 봤다고 통신은 말함.



- **평양서 북한·영국여자축구 친선경기(9/17, 조선신보)**
 - 신보는 영국 프로축구클럽 미들즈브러의 여자팀이 친선경기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
 - 신보는 “미들즈브러시 여자축구팀이 오늘(17일) 평양에 도착해 조선(북한) 여자축구팀과 19일과 21일 두 차례 친선경기를 갖는다”면서 “미들즈브러는 조선 남자축구대표팀이 1966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팀을 이긴 곳으로, 조선 축구와 인연이 깊은 도시”라고 소개

- **北추석 씨름대회 리조원 우승…상금은 1t 황소(9/17, 조선신보)**
 - 신문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시 ‘릉라도 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제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리조원이 우승을 차지했다면서 그에게는 “980kg짜리 대황소와 금소방울, 상장이 수여됐다”고 보도
 - 이어 “지난 15일 열린 결승경기에서 99kg인 리조원은 105kg으로 자신보다 덩치가 큰 평양시의 박광철(31)을 맞아 재치있는 ‘들배지기’와 ‘들어접지기’로 승리했다”고 소개

- **평양 신축 아파트에 방공호 건설(9/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 내 지하대피소 설치의 의무화한 데 따라 평양시에 건설 중인 10만 세대 아파트에 지하 방공호가 마련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평안북도 삭주군의 소식통을 인용,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공사에 참여하면서 지하대피소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지하 대피소는 유사시 적의 공습이나 화학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게 만든 공간으로 아파트 건물기초 벽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함.
 - 량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도 RFA에 “지난해 5월 ‘150일전투’(주민 동원형 증산운동)가 시작되면서 일반 아파트도 대피소를 설치하라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문이 내려왔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개막(9/13, 평방)
- 제7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폐막식, 최태복(黨 비서)·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장/폐막연설) 등 참가자 진행(9/15, 중통)
- 경희극 ‘산울림’ 공연, 함경북도 청진에서 진행(9/16, 중통)
- 平北 신의주시 당원들과 근로자들, 8월에 내린 폭우피해 복구사업(침수된 섬마을 살림집 건설, 철길·제방복구작업 등)에서 성과 이룩(9/16, 중방)
- 北 조선요리협회, 약산미나리·낙규·산들쭈 등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남새와 과일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가공방법’ 완성(9/16, 중방)



2. 대외정세

● 유엔총회 北 대표로 박길연 부상 참석(9/15, 연합뉴스)

- 제64차 유엔총회 북한 측 대표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참석할 것이라고 유엔 고위관계자가 밝힘.
- 이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박 부상이 대표로 참석해 기초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과 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 사이 회담, 주상성(인민보안부장), ‘통반 썬아편’(라오스 안전보위성) 등 참가자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9/14, 중통)
- 캄보디아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 9/11 ‘리인석’ 캄보디아駐在 北 대사를 통해 平北 신의주시 큰물피해 위문금 전달(9/14, 중통)
- 박의춘 외무상, 北-멕시코 외교관계 설정 30돌 즈음 상대국 외무상에게 9/4 축전(9/14, 중통)
- 北 외무성 대표단(김형준 부상), 쿠바,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방문차 평양 출발(9/14, 중통)
- 김영남, 訪北 라오스 안전보위성 대표단과 담화(9/15, 중통)
- 최태복(黨 비서), 訪北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싼크트 펠덴시’위원회 대표단과 담화(9/15, 중통)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9/15 과테말라 독립 189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9/15, 중통)
- 「제5차 北美 군부 대좌급 실무접촉」, 판문점에서 진행(9/16, 중통·중방)
 - 북측은 朝美 공동검열단 명칭, 단장급수, 인원수 등을 각기 자기측에 편리하게 정하고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진입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차 접촉을 28일경 판문점에서 가지기로 하였음.
- 김영남,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스웨덴 대사(바르브르 엘름)에게 신임장 접수(9/16, 중방)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멕시코 독립 200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9/16, 중통)

3. 대남정세

● 北, 남한쌀 수용 ‘일제때 보급투쟁 비숫’ 선전(9/14, 열린북한방송)

-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가 수해구호용 쌀지원을 제안하기 전부터 북한 당국은 남한의 쌀 지원을 받는 것이 일제 때 ‘보급투쟁’과 비슷하다



고 선전

- 방송은 함경북도 무산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 11일 당원만 참석하는 토요강연회에서 ‘남조선 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수해구호용 쌀 지원을 제안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달됐다”면서 “하지만 강사는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도 남북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또 “강연에서는 남조선 쌀을 받는 것을 항일 무장투쟁 시기 일제로부터 쌀을 빼앗아 보급품으로 썼던 것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모두 군대에 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남조선 쌀이 지원된다는데도 주민들의 기대는 ‘시장에서 중국산 쌀값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전단살포와 NLL문제 논의하자”(9/16,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확인
- 정부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전날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정부 관련부처에서 회담 수용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소식통은 “북한은 전통문에서 전단 살포와 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북한의 회담 제의 진정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전통문에 명시한 의제로 보서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제라면 현재로서는 회담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함.
-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 2008년 10월 2일 개최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음.

● 北 “10월 21~27일 이산가족상봉 갖자”(9/17, 연합뉴스)

- 북측은 1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오는 10월21일에서 27일까지 금강산 지구 내에서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실무접촉 기초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봉 장소로는 ‘금강산 지구 내’를 제시했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을 정례화할 것과 이번 상봉에서는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일자로 오는 10월 19일~24일을 제시했으며,



북측이 ‘금강산 지구 내’로 언급한 상봉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 장소를 명시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

- 북측이 제의한 상봉 일정이 하루 더 긴 것은 보통 2박 3일씩 1, 2진으로 나눠 진행되는 상봉 일정 사이에 하루의 여유를 두자는 의미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
-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실무접촉을 시작, 약 55분 만인 오전 11시 25분께 오전 회의를 끝냈음.
- 남북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양측이 제시한 상봉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할 예정
- 남측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인 김의도 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대표로 나섰으며, 북측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가 대표단으로 나왔음.

○ 北, 쌀지원 불평…‘겨우 5천t, 차관형식’(9/19, 통일신보)

- 신보는 19일 “남조선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북의 동포들에게 수해물자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준다고 법석 떠들었는데 정작 지원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쌀 5천t이었다”면서 “그 심보, 속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비난
- 통일신보는 ‘대북지원의 손’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올해 북의 신의주, 개성을 비롯해 전반적 지역에서 큰물이 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생겼으며 수 많은 논밭이 물에 잠겨 식량사정이 어렵게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측이 보내겠다는 쌀 5천t은 공화국 주민 하루분의 분량도 안되는 것”이라고 불평함.
- 이 신문은 “그나마 빌려준 쌀을 후에 돈으로 받는다는 차관형식이고 그것마저도 남북관계의 파국적 위기를 북이 초래한 듯이 사실을 거꾸로 묘사하며 갖은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주장
- 이어 신문은 “큰물피해를 입은 동족에게 쌀을 조금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통일기금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가”라며 “남과 북은 한 혈육이고 지금은 통일로 가는 과정이다.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마음 속의 닫힌 문부터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

■ 기타 (대남)

- 南 1함대사령부의 대규모 해상기동훈련(9/14~17, 동해) 실시를 “조선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9/14, 중방)
- 北 ‘조평통’ 서기국, 9/15 國防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표(9/13)를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보도 제964호’ 발표(9/15, 중통; 9/16, 중방)
-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자주적 평화통일



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며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투쟁 煽動(9/16, 중
통·노동신문)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5주년 맞은 북핵 9.19 공동성명>(9/19)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평가받고 있는 ‘9.19 공동성명’이 나온지 19일로 5년을 맞았음. 이 선언은 6자회담의 역사적 산물이지만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북한의 핵문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들이 채택한 6개항의 합의문임. 6자회담 개시 2년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한 것으로 기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형식상 높은 수준인 만큼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획기적인 선언으로 평가됐음.
-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도록 명시했음.
- 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에너지와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도록 했음. 특히 한국은 그해 7월 내놓은 북한에 대한 200만KW의 전력공급 제안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별도의 포럼에서 다루도록 했음. 반면 핵폐기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핵폐기의 범위와 경수로 지원 등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공동성명은 북핵문제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데다 지난 5년간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이행조치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음.
- 특히 공동성명 채택 직후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음. 마카오의 은행인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북한 등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한껏 끌어올렸음. 가까스로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을 돌려주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인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가 어렵사리 만들어졌음.
- 이들 합의는 시한을 정해 북한이 핵시설 폐쇄 봉인과 불능화 및 신



고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이 중유 등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의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6자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음. 북한은 ‘10.3합의’에서 불능화와 신고를 그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의 핵활동을 검증한 핵 신고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수싸움은 계속됐음. 어찌보면 이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생존게임 성격이 짙었음.

- 결국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자 북핵 문제는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음. 2009년 1월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 6자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됐음. 북한은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그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벼랑끝 전술’로 한반도 정세를 흔들었음.
- 이에 미국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안보리 결의 제1874호를 주도하고 한국도 북한 핵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는 ‘비핵개방 3000’을 고수하며 북한을 압박했음. 지난해 하반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유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3월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음. 지난 7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뒤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관련국들의 행보가 강해졌지만 협상 테이블이 언제 마련될지는 불투명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먼저 나서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이 체제유지 수단으로 삼는 핵개발을 섣뜻 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임. 북핵 문제의 답보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9.19 공동성명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합의로 볼수 없다는 회의론이 커졌음.
- 이런 실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이 아직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함.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합의조치를 이행하면 체제보장, 경제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나아가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9.19 공동성명은 중요한 합의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클린턴, ‘北과의 대화’ 제3의 수단 간주”(9/18)

- 미국과 동맹국들은 현재의 대북정책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음. WP는 향후 방안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일반적 합의 도달과 함께 새로운 (대북) 전략의 대체적인 윤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 이 신문은 강화된 제재와 군사훈련을 포함한 ‘전략적 인내’가 무한정 계속될 경우 북한 내 강경파들을 대담하게 만들거나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WP는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북한의 잘못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지만 오바마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종의 애도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요구가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한국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북한의 사과나 유감표명)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만 WP는 북한이 유감 성명을 발표한다면 그후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덜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WP는 지난 8월 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재개(reengage)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납득하게 됐다고 전했다.
-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는 의자에 제재와 군사훈련이라는 두개의 다리가 있었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필수적인 세번째 것(다리·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다른 참석자는 회의에 참석했던 누구도 북한이 곧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설득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봉쇄(containment)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데 점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음. WP가 전한 세미나가 포린폴리시사가 지난달 보도했던 8월초 열렸다는 클린턴 장관 주재의 대북정책 평가회의와 같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미국무부 “北 비핵화 위한 행동 보여야”(9/17)

- 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먼저 하면, 그에 상응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다는) 희망만 보여줄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만일 북한이 (지금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응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가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조치 가운데는 남한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통해 그들이 역내에서 야기한 긴장을 현저하게 줄이는 일이 포함된다”고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사태 이후 조성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양자 혹은 다자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책임은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취해야만 할 조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보여줄 행동을 토대로 그들이 대화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 그런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진정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렉슨 “北-이란, 기술이전 증거있다”(9/17)

- 미국은 16일 북한과 이란간에 금지된 군사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월레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북한과 이란간에 현재 기술 이전이 있다는 증거들을 보고 있느냐’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북한과 이란간의 기술이전이 심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북한은 금지된 군사기술을 하나 이상의 국가들에 이전하기 위해 다수의 국제규범과 제재, 결의안들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자주 입증해 왔다”고 비난했다.
- 하지만 그는 북한과 이란간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렉슨 차관보는 또 ‘북한이 신뢰할 만한(reliable) 핵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Not to our knowledge)”라고 답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같은 대답을 했다. 그는 “북한이 핵장치들을 폭발시킬 능력은 입증했다”면서 “북한은 핵능력을 갖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캠벨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성공중”>(9/17)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으로 표현되는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캠벨 차관보는 이날 한반도 안보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언급한 ‘전략적 인내’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이런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문제 등에 대한 진정한 협상 과정에 오르기를 원한다는 진지하고 명확한 신호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월레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같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다시 사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의미 있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블랙박스”와 같은 나라라고 묘사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블랙박스”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일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종종 진실은 그 정보 중 일부가 틀린 것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라고 대북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 그는 “북한은 (정확한 정보수집이) 매우 매우 어려운 목표물”이라고 언급한 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동기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고 답했음.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잇따른 미·중 고위급 인사의 상호교환 방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강화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음. 그는 중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비난을 주저한 이유와 관련, 북한과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도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매우 복잡한 셈법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한편 캠벨 차관보는 이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협상을 강하게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과 관련, “천안함 사건이 카터의 기고문에서 빠진 것에 대해 놀랐다”는 말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음.

● 캠벨 “남북관계재개,6자회담 위한 필수조치”(9/17)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6일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캠벨 차관보는 이날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절한 여건’을 묻는 질문에 “필수적인 첫번째 조치(essential first step)는 남북한간의 관계 재개(reengagement)”라면서 “그것이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했음.
- 그는 또 “우리가 오랫동안 밝혀왔던 것처럼 북한이 2005년(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6자회담 재개의 다른 조건임을 밝혔음. 그는 “우리는 이런 시그널들을 매우 명확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또 “우리는 북한과 정말 생산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관보는 이날 오후 싱크탱크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관련 토론회에서도 “미국은 적절한 환경하에서 6자회담의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과의 6자회담 협상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의 관계 재개가 있어야 하며,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진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할 시그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이런 언급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절한 환경’으로서 우선적으로 남북 관계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한미 양국이 6자회담의 출발점이자 선행조치로 남북한 접촉,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임. 이 밖에 캠벨 차관보는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한미 FTA는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



라고 강조했다.

● 그렉슨 “北 ICBM, 이론상 美 공격 가능”(9/17)

- 월레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핵무기와 결합될 경우 북한의 위협수준은 기존과는 다른 차원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그렉슨 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 한반도 현안 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4월 발사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 실패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역량이 아직 세련된 기술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미사일은 이론상으로 미국 영토를 공격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감안할 때 탄도미사일은 더욱 심대한 우려 사안”이라며 “핵무기 탄도미사일이 개발되고 배치될 경우, 역내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위협의 수준은 현재 고조된 위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음.
- 그렉슨 차관보는 이와 함께 “북한은 자체 목적을 위해 재래식·비재래식 무기 역량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무기 수출을 함으로써 역내 미국의 동맹, 우방국과 이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 수출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고, 북한의 행위가 단지 한반도나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른 위험한 행위자들과 연계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내주 유엔총회서 한·미·일 3자회담 주목>(9/17)

- 다음주중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기간 한·미·일 3국의 한반도담당 고위당국자들간 3자회담이 성사될 지 주목됨.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총회기간 뉴욕을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5자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교소식통은 “총회기간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6자수석 대표나 한반도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양자협의를 함께 3자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조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한·미·일 3자회담은 천안함 조사가 진행되던 5월26일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이후인 7월20일 두차례 열린 바 있음. 3자회담 참석자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었음.
- 미국측에서 6자회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내주부터 개강하는 플레처스쿨의 학장을 겸



임하고 있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3국이 회동할 경우 북한이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임.

-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일정차 방한 중인 보즈웬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중으로 시내모처에서 위성락 본부장을 만나 방중결과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방한은 사적인 목적의 방문으로 관련 일정이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라며 “다만 상황이 허락되면 위 본부장과 만나기로 한 상태이며 현재 실무선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중일정을 마치고 16일밤 방한한 보즈웬스 대표는 이날 중 플레처스쿨 출신 동문모임 만찬행사에 참석한 뒤 본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 캠벨 “美, 北 핵무기국가 불용 입장 불변”(9/16)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캠벨 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의 한반도 현안 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미국은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중지하고,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 안전보장과 국제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라고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최근 대북제재 조치 발표와 관련, “새 제재 조치는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나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의 타깃은 오로지 북한 군부와 지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 캠벨 차관보는 “북한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에 가장 당면한 위협요인”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한국 해군 4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 공격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예측할 수 없고 지속적인 위협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천안함 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긴장 증폭이라는 상황을 맞아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 中, 6자회담 조속재개 거듭 촉구(9/16)

- 중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중



국이 유관 당사국들이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 그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낙관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이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면서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 정세 완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최근 미·중간의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등을 계기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中학자들,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나서>(9/16)

- 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은 16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중의 계기로 북미가 대화 재개에 들어갈 필요성을 공감하고 탐색 단계에 들어 갔다고 진단했음. 류장용(劉江永)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기고한 시평에서 6자회담의 재개 시기를 점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음.
-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 주둔 군사력 강화 등 강경자세를 통해 역내에 존재감과 역할을 확실히 부각시킨 만큼 이제 다른 (평화적) 역할을 할수 있음을 과시할 준비에 착수했다는 분석임.
-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강·온 양면 정책을 교대로 실시해왔고, 역내 정세장악을 바라지만 전쟁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화해노선으로 돌아설 때가 됐다는 것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한·일에 이은 중국 방문을 보는 류교수의 시각임.
- 지린(吉林)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성(王生) 교수는 이날 차이나데일리에 기고한 시평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와 외부지원 중단에 화폐개혁 실패와 흉수피해까지 겹쳐 생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에 새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음.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격 방중기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점이 이를 증거 해주고 있다는 것임.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데는 류교수도 찬성했음. 북한은 지금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발전전환을 촉진



● <보즈워스 방중..美中 협의내용 뭘까>(9/16)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6일로 중국 방문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한국·일본에 이어 15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같은 날 중국의 카운터 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며 16일 오전에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했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이번 한·일·중 방문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 순방에 이은 것으로 회담 재개 노력의 프로세스라는 지적임. 이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중을 통한 ‘미중협의’후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다시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회담 재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그러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그 형식은 물론 사전조건을 두고 당사국 간에 의견차이가 큰 점으로 미뤄 이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중은 이견의 거중조정을 위한 탐색 성격이 짙어 보임. 우선 한미 양국이 이달 초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지난 주 방한을 통해 ‘북미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이라는 중국의 3단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우다웨이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이를 통보했을 것으로 관측됨.
- 한국 정부는 ‘선(先) 천안함 사태 해결 후(後)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집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도발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 어떻게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3단계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미측에 통보했고 미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음. 일각에서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3단계안을 수정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실제 보즈워스 대표는 지난 15일 일본 방문에서 6자회담에 앞선 북미 접촉 개최 가능성과 관련, “그런 일들을 과거에도 했고 다시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두고 있음. 또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14일 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 전 북미 양자접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과거에 유용하다고 느낄 때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가져 왔으며, 미래에도 (북한과의) 양자 및 다자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있는’ 조치를 할 경우 북미 접촉의 형식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여건에 따라서는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접촉 개최 가능성은 적지 않



아 보임. 관심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보일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음.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거론한 바 있음. 미국은 근래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북한이 호응한다면 비핵화와 관련한 성의있는 조치로 해석될 공산이 큼.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단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중으로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미중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셈’이라며 북한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음.

● 美 “北, 구체적 행동으로 입증해야”(9/16)

-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협상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행동으로 이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단순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대해 우리는 보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다면, 그들은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무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 및 이른 시일 내 NPT(핵비확산조약)와 IAEA 셰이프가드 조치로 되돌아올 용의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 행동들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회원국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의 “투명하고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 이 밖에 그는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조치 등을 취할 경우 대북제재가 철회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에너지·경제 지원이 이뤄지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北 ‘비핵화 행동’ 6자회담 재개 관건>(9/16)

- 한국 정부의 최종 보고서 발표로 천안함 국면의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위성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이달 초 방미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이번주 방한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 양국은 일단 천안함 사건 이전까지 중국의 주도로 추진돼 왔던 ‘북미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이라는 3단계안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 천안함 사건이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인 만큼 남북 당사자간에 이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북미간 접촉에 이



은 6자 예비회담, 6자 본회담 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임. 정부 고위소식통은 “예비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는 중국의 3단계 중재안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한미가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 접촉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양자와 다자접촉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가야한다는게 양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형식 측면에서 본다면 북미접촉부터 시작하던 중국의 3단계안 출발점이 남북대화라 바뀐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화해 조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임. 한미 양국의 생각은 남북접촉을 통해 천안함 사건 등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고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북미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 다자접촉을 거쳐 6자회담으로 복귀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형식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내용도 바뀌었다는 점임.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복귀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때에만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의 입장은 비핵화 진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양국 모두 과거와 같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미 양국이 단순히 북한의 선전장이 될 수 있는 6자회담의 장을 펼치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음.
- 미국도 이런 입장을 최근 거듭 강조하고 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첫번째 일은 북한이 건설적으로 개입(engage)하고 그들의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본다면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는 특정한 만남이 유용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태도 변화 및 의무준수가 대화에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는 유명환 전 외교장관이 지난달 밝혔던 영변 핵시설 불능화, 국제사찰단 복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 상태임.

● 訪日 보즈워스 “北제재 완화 논의는 시기상조”(9/15)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회담 당사국들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일본 측과 동의했다면서도 “지금은 향



후 몇 주간 외교활동으로 부산을 떨 것이라는 예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와 관련, 보즈워스 대표는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되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방침임을 재차 언급했음. 그는 이어 “북한이 회담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증거를 찾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낳는 대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6자회담에 앞서 북·미 양자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을 과거에도 했고 다시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는 게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음.
- 보즈워스는 또 6자회담 재개로 나아가는 국면에서 남북한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회담 재개 토대를 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가장 잘 진전시킬 수 있을지’ 가능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점은 여러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전날 서울을 떠나 일본에 도착한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임.

● 러시아 “천안함 사태 조사 종결 원해”(9/15)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14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음.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외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이 끝나야 한다고 본다”며 “러시아는 서울, 평양과 대화 및 협력 재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음. 이는 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후 나온 러시아 고위 당국자의 첫 관련 언급임.
- 보로다브킨 차관은 아울러 남·북한과 관계에 상당한 경제적 이해가 걸려있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제재) 결의 1874호는 전례 없이 강력했다. 이 결의에 따라야지, 독자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음.
- 이어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 틀을 통해서만 다뤄져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6개국 대화 체제를 대단히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음. 보로다브킨



- 차관은 또한 천안함 사태 후 러시아의 노력이 지역 안정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역할이 유효함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기도 했음.
-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와 대만, 국가 간 오래된 갈등, 영토분쟁 등 충돌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지역에서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최근 국제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태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할 효과적인 체제가 미흡하다면서 천안함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음.
 - 한편 천안함 최종보고서에는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조사팀장이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자필로 서명했으나, 사건 조사를 위해 일주일 동안 방한했던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음.

● 보즈워스 내일 방중..6자재개 협의(9/1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측과 6자회담 재개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내일 베이징에 도착해 양제츠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장 대변인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단계별 목표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각 당사국들이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음.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떠났으며 15~16일 방중한 뒤 귀국할 예정임. 중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 보내 ‘북·미 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3단계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한국과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 “北-美만 양자접촉 아니다”(9/14)

- 미국 국무부는 13일 서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자접촉’을 거론한데 대해 일반론적 의미라고 밝혔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는 양자 및 다자접촉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면서 “양자접촉은 미국만이 아니라 6자회담의 어떤 당사국간의 접촉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즈워스 대표가 언급한 양자접촉이 북미접촉만



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임.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약식 회견에서 “우리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양자접촉 및 다자접촉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이 생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양자접촉과 다자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 같다”며 “북미간 양자접촉을 배제하지 않지만 남북간 벌어지는 일들도 양자접촉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 보즈워스 “양자접촉 후 6자재개 기대”(9/14)

-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시점에서 재개시기를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우리는 양자접촉을 거쳐 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다자접촉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 이는 최근 중국이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제안한 단계적 6자 재개 프로세스(북·미 양자대화 이후 예비 6자회담을 갖거나 예비회담 없이 본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됨.
-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이 생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양자접촉과 다자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 같다”며 “북·미간 양자접촉을 배제하지 않지만 남북간 벌어지는 일들도 양자접촉의 일부”라고 말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및 우방에 의한 제재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협상을 원하고 북한이 그런 바람과 결정을 공유하는 ‘조짐(indication)’을 찾고 있다”며 “일단 그런 여건이 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목표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다른 요소를 추구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에 기대하는 ‘조짐’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그는 “오늘 대화는 매우 유익했다”며 “우리는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매우 긴밀히 함께 해나가겠다는 바람과 결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는 곧 도쿄와 베이징을 가는데 모스크바는 방문하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기에 모스크바나 다른 곳에서 러시아와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위성락-보즈워스 회동..6자재개 물꼬틀까>(9/13)

-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의 회동은 위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지난 3일(현지시간) 보즈워스 대표를 만난 뒤 불과 9일 만임. 그만큼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관련국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번 회동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최근 해빙무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기류와 맞물려있음. 남북관계를 고리로 천안함 사건 이후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북한은 지난 7일 대승호 선박과 선원을 우리 측에 송환한데 이어 10일 대한적십자사에 추석을 기한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하는 등 최근 대남 대화공세를 펴고 있음.
- 우리 정부도 13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쌀을 포함한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발표한데 이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역제의하기로 했음. 만약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를 받아들이면 천안함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본격적으로 풀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런 남북관계 흐름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보즈워스 대표가 위 본부장과 회동에서 북한의 기류를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보즈워스 대표는 한국에 이어 중국을 찾아 미국과 중국간 ‘G2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밑거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임.
- 아울러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를 무대로 6자회담 재개 논의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만 6자회담 재개 흐름은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음.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미국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가 주최 제네바 국제안보콘퍼런스에서 북한이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려는 ‘실질적인 조짐’을 보일 경우 6자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고위당국자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에서 새로운 안이 나와야 진전이 있는데 북한이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에 따라 천안함 국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 흐름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반면 북한이 이달 중순 44년 만에 개최하는 당대표자회의를 마친 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그럴 경우 연말까지 6자회담 재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 보즈워스 “머지않은 시기에 대화 가능 낙관” (9/13)

-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그리 멀지 않은 시기(not too distant future)에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신각수 외교장관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진전을 위해 우리의 동맹 및 우방들과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국과의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 직무대행은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방한이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前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방북(9/18)

-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UC샌디에이고)의 수전 셔크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 소장과 그 일행이 1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셔크 소장 일행의 방북 사실만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 셔크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냈으며,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에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과 미국의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 6자회담 참가국 관리들이 참석하는 ‘동북아협력대화’를 주재한 바 있음.
- 앞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셔크 소장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18~23일 방북해 양국간 민간 차원의 교류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방송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방문단에는 미국의 민간 북한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캐린 리 사무국장도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북단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 방송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을 시도했지만 국무부의 만류로 연기한 바 있다”면서 “최근 미



국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에 이어 전문가들의 방북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미·북간 대화 재개 등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 <美, 의회 청문회서 ‘北 천안함 공격’ 설명>(9/17)

- 미국 상원 군사위가 16일 개최한 한반도 현안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격침됐다’는 판단을 비교적 상세히 보고했음.
- 월레스 그렉스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료로 배포한 기초발언을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 “다국적 조사를 통해 야음을 틈타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가 충격파와 버블제트(수중폭발로 인한 물기둥) 효과를 낳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을 설명했다.
- 그렉스 차관보는 “충격파와 버블제트로 인해 천안함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했고, 모든 일들은 ‘백색 섬광 기둥’속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초발언문에서 사고 원인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과정을 충실히 설명했다.
- 샤프 사령관은 우선 “천안함 침몰 후 한국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로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민·군 합동조사단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국제조사단의 조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철저하고도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그 조사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 샤프 사령관은 이어 “조사 결과는 유엔사군정위(UNCMAC) 특별조사팀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고, 특별조사팀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조사팀은 “북한이 적대행위 중지 의무를 위배했고, 백령도 인접 영해를 침범했으며, 천안함에 대해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공격을 자행했다”는 점을 정전협정 위반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사군정위 특별조사팀의 결론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지했다”며 침몰 원인·조사·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 국방부 당국자들이 천안함 침몰 원인과 조사과정을 이처럼 세세하게 보고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현안 관련 청문회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내에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발언 등을 계기로 ‘천안함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임. 한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배경과 관련, 2009년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 공격 또는 권력승계 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기존의 2가지 분석 외에 새로운 제3의 가설도 내놓았음.
- 그는 북한은 한국에서 주요한 행사들이 열리기 전에 도발을 해 온 경향이 있었다면서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한



국에는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적 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시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대북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100만弗 벌금”(9/16)

- 미국이 시행 중인 대북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형사적으로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 제재 개관’이라는 8쪽 분량의 보고서는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형사상으로 매길 수 있는 최대 벌금은 100만달러이며,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또한 보고서는 민사상으로는 최대 25만달러, 혹은 신용장 거래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물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범위를 다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 8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13551호 등 두 개가 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제재대상에 포함,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임.
-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발표된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학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음.

● 카터 “北이 곱즈 석방위한 방북 요청했었다”(9/15)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4일 자신은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불법 월경 혐의로 수감돼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31)를 귀환시키기 위해 방북했으며 곱즈는 북한에서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음. 카터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평양 방문이 남북한과 미국 간 평화회담에 활력소가 돼 평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나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지난달 27일 곱즈와 함께 평양에서 미국으로 귀환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 카터센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 방북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관련 이야기를 털어놓았음.
- 카터 전 대통령은 곱즈와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당시 예정된 기자회견은커녕 사진 촬영을 위한 포즈 한 번 없이 바로 각자의 길로 헤어진 바 있으며, 또 지난달 31일 국무부에 방북결과를 설명했으나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바 있음.
-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의료진이 곱즈의 건강상태를 검진 한 뒤 ‘최상의(superbly)’ 대우를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곰즈가 체포되고 8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은 뒤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으며, 자살 시도 이후에는 병원의 독실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카터는 또 북한으로 곰즈 석방을 위한 사적인 여행을 하기에 앞서 백악관과 국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내려고 5주 동안 일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 카터는 이어 북한 관리들은 카터 자신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야 곰즈를 석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해 왔다며 “그들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곰즈를 데려가게 할 의향이 없으며, 내가 거기에 다시 오기를 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카터는 지난 94년 평양을 방문,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 제1차 북핵 위기에 따른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킨 바 있음. 카터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자신이 만난 북한 지도층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미국·한국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끄는 평화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 카터는 이와함께 미 행정부는 동맹국인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모든 접촉을 단절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 정부의 일부 외교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외교적 공백 상태로 두고 있는 국가로 북한과 시리아, 네팔, 수단 등을 지목하면서 자신들이 외교적 공백을 메울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밝혔다. 카터는 미국이 모든 지역의 모든 부분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카터센터는 가능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곳이라면 갈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사람을 만날 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카터가 참석한 행사장에는 400명 이상의 청중이 자리를 메웠으며 카터는 이날 구두 질문은 받지 않고 종이쪽지에 쓴 질문에만 답변을 했다.

● “北 새정권 출범해도 美대북정책 변함없을 것”(9/15)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새로운 (북한)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후 현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코리아체어를 맡고 있는 그는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 차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 정보부족을 들면서 북한의 당대표자회 결과가 권력승계를 암시해 주더라도 권력승계의 시작인지 마무리인지 잘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미국과 한국은 천안함 공격에 대해 어떤 해결 없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 그는 “북한의 새 정권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비핵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에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관측했음.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 등을 내세워 권력승계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김정일 사후 권력투쟁이 가능성 밖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이 밖에 그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다면 북한이 후계세습을 용인하는 유일한 공산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새 지도자가 들어설 경우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낙관론과 김정일 독재 때와 같은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 美, ‘北 인신매매 방지 미흡’ 제재대상 재지정(9/14)

-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미국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음. 백악관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 쿠바, 미얀마(버마), 짐바브웨, 이란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의한 미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음. 이에 따라 북한에 미국 정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금지됨.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등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 지원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음.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의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가 인도주의적 차원 외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국 관리들에 대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음.
-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음.

다. 중·북 관계

● “中, 北원정리-라진 도로보수 설계 착수”(9/18)

- 중국이 동해 해상항로 확보를 위해 라진항 사용권을 받아내면서 북한에 약속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를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음. 언론은 북한이 최근 이 구간 도로 보수 공사를 승인, 중국의 관련 기관들이 도로 설계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그러나 이 도로 보수 공사의 착공 시기와 노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았음.

- 두만강 유역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를 개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삼으려는 중국은 해상 항로 확보를 위해 2008년 북한 라진항 사용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2차선 비포장도로인 원정리-라진항 도로 정비를 약속했음. 두만강 유역의 지하자원과 곡물을 라진항으로 운송, 동해 항로를 통해 중국 남방이나 동북아지역으로 수출하려는 중국으로서도 이 도로 정비가 시급한 형편임. 중국은 지난 6월 훈춘과 원정리를 잇는 노후한 두만강 대교를 보수한 데 이어 훈춘-라진-상하이 해상 항로 개설을 승인했으나 원정리-라진 구간 도로 사정이 나쁜 탓에 대규모 물류 운송이 어려워 지금까지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北, 관세 대폭 인상..中변경무역 위축(9/16)

-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국 연변(延邊)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최근 함경북도 일대 북한 세관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보다 배 이상 높게 적용하고 있음. 북한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는 연변의 한 무역상은 “종전 10t 트럭 한 대당 2만 위안(북한 돈 400만 원)가량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이 지금은 5만 위안(북한 돈 1천만 원)으로 배 이상 인상됐다”고 말했음. 이 무역상은 “북한 세관들이 지난 두 달여 동안 ‘상부에서 검열이 나왔다’는 이유로 중국산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며 “최근 통제가 완화됐지만 관세가 너무 올라 무역상들이 북한으로 물건을 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최근 투먼(圖們) 카이산툰(開山屯)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세관을 통해 7t가량의 중국산 생필품을 들여간 북한 무역일꾼이 3만5천 위안의 관세를 물었다”며 “종전에는 1만4천 위안이면 족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관세뿐 아니라 북한 세관원들이 요구하는 TV나 가구 등도 장만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무역일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중국과의 변경무역도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음.
- 그는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나온 돈이 얼마 안 된다”며 “관세를 물고 나면 물건을 해갈 돈이 얼마 안 되는데다 이익을 남기려면 가격을 많이 올려 팔아야 하는데 화폐개혁 이후 경제가 악화된 북한에서 제대로 팔릴지도 의문이어서 이번엔 그냥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중국산 물품 반입이 크게 줄면서 최근 북한의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귀띔했음.
- 열린북한방송 등 대북매체들도 이달 초 북한 주민들을 인용, 북한 당국이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앞두고 국경지역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 물품 유통에 차질이 생기면서 북한 내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음. 지난 달 방중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고 이달 초 창춘(長春)에서 열린 동북아 무역박람회에 참석한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이 라선특별구를 국제가공무역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의 경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북한이 오히려 관세 인상을 통해 변경무역을 통제하고 나선 데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임.

- 대북 전문가들은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보따리 무역상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거나 올 초부터 진행된 무역회사 통합 차원에서 개인 무역일꾼들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음. 개방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한 북한의 군부가 시장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中 “창지투 건설, 조선족이 핵심 역할”(9/14)

-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건설 사업에서 조선족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길림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지난 11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과 중국 조선족의 작용’을 주제로 열린 연구 토론회에서 이바오중(衣保中)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중국 내 조선족은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민(한민족)과 혈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 지린성 당위원회 고문이기도 한 이 교수는 “조선족은 한국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국민과 지리적으로 가깝고(地緣相近), 혈연적으로 가까우며(親緣相近),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文緣相統) 소통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조선족이야말로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주력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이런 발언은 창지투 선도구에 ‘초국경 경제협력지구’를 건설,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삼으려는 중국의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신문은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80만 명이 거주하는 것을 비롯해 창지투 선도구 개발지역에 모두 100여 만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중국이 창지투의 해상 출구로 삼은 북한 라선에 4천여 명의 조선족이 무역에 종사하고 한국에도 38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조선족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면 창지투 선도구건설 뿐 아니라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임.
- 중국은 지난해 11월 창지투 선도구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했으며 해상 출로 확보를 위해 북한 라선항과 청진항 사용권을 잇달아 확보했음. 중국은 라선과 청진항을 이용, 훈춘(琿春)의 석탄



등 동북의 지하자원과 곡물을 상하이를 비롯한 남방으로 운송하는 해상 항로를 연내에 본격 가동할 계획임. 북한 접경 투먼통상구에는 양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관세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구를 세워 이달부터 시험운영키로 하는 등 북한과의 교역 확대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일 창춘(長春)에서 열린 ‘다투먼(大圖們) 제안회의’에서 이사오준(易小淮)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동북아 국가들과 국경을 초월한 경제 협력을 통해 창지투 선도구에 초국경 경제협력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음.

● 中 투먼시 “北과 호시무역 곧 개시”(9/14)

- 중국 투먼(圖們)시가 북한과 무관세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 무역을 이달 중 시작할 것으로 보임. 투먼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시 무역구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 이달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호시(互市) 무역이란 접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관세 교역을 하는 것임.
- 투먼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북한 남양과의 호시무역을 위해 투먼통상구 부근에 1만㎡ 규모의 호시무역구를 마련했으며 호시 무역을 시행을 위한 법률도 정비했음. 투먼시는 이 호시무역구를 연차적으로 확대, 100만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보세창고와 물류정보센터 등을 갖춘 1.36km²의 대규모 호시무역 시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임.
- 투먼은 남양을 거쳐 청진항으로 빠지는 두만강 유역의 대북 교역 창구로, 중국은 북한의 라진항에 이어 청진항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투먼 일대를 대북 경제 협력 거점으로 육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최근 투먼-남양-청진 구간 노후 철도를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데 이어 투먼통상구를 국가 1급 통상구로 승격시켰음.
- 이사오준(易小淮)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지난 1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다투먼(大圖們) 제안회의’에서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을 제안한 것도 투먼 일대에서의 북-중 경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투먼에서 북한과 호시무역에 나서고 대규모 호시무역구를 건설하는 것 역시 중국이 구상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음.

● “北, 새 개발구 추진..中에 자문”(9/13)

- 북한이 개성공단과 라선특별시 등 현재의 경제특구가 아닌 새로운 곳에 경제 개발구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에 광범위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곳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개발구를 구상하면서 중국에 자문



을 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중 양국 사이에 의견교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방중에서 동북 3성을 두루 방문한 것도 경제발전과 새로운 개발구 구상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북한이 추진 중인 새로운 개발구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려는 압록강의 섬 황금평과 위화도 또는 남포항 등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중국은 대북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부 인도 △기업 주도 △시장원리 △상호 호혜주의 등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북한 측은 새로운 경제개발구를 추진하면서 동북 지방의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중국 기업들이 신뢰할 만큼 북한의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천안함 사태가 일단락되고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는 등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이 변하게 되면 북중간 민간 교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편 개최가 임박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제3차 당대표자회가 예상과 달리 권력승계 문제나 정책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중국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음. 중국의 학계나 정계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조직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대표자회에서 나이 어린 김정은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임.
- 중국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되더라도 나이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의 특성상 그가 낮은 직급부터 올라갈 것이란 관측들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이미 작년 말부터 경제발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전망도 중국 측으로부터 제시되고 있음. 베이징의 대북소식통들은 “한국 언론과 서방 외신 등은 40여년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파격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日 “北 보위부 간부가 일제 사치품 주문”(9/17)

- 일본 경찰이 최근 잇따라 적발된 일제 화장품과 피아노, 고급 차 등의 대북 수출 사건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음.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 야마구치(山口), 구마모토(熊本), 돗토리(鳥取), 히로시마(廣島) 등지에서 대북 불법 수출 사건 6건을 적발했음.
- 수출 품목은 화장품 외에도 피아노와 고급 차, 일용품, 중장비 등이



었고, 이중 3건은 중국 다롄에서 조선족이 운영하는 다롄글로벌이라는 무역회사를 거쳐 북한의 조선신흥무역과 조선능라도무역으로 넘어갔음. 일본 경찰은 조선신흥무역은 국가안전보위부 계열의 회사로, ‘엄광철’이라는 성명을 쓰는 사장 역시 보위부 간부라고 파악하고 있음.

- 신흥무역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회사임. 조선능라도무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인 ‘39호실’ 계열 회사로 분석됐음. 일본 경찰은 엄광철이 조선능라도무역의 간부도 맡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일본 당국은 일제 사치품을 수출한 일본 회사 관계자로부터 “엄광철이 ‘북한 지배층 사이에서 일제 화장품이나 속옷, 가공식품 등의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며 “북한이 회사명을 지정해 일본 제품을 주문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화장품 등 사치품, 지난해 6월부터는 일용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제3국을 거친 대북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중장비는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 수출을 금지했음.
-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2월 보위부 간부인 ‘엄경철’이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제재가 시작된 이후 중국의 ‘다롄글로벌’과 한국 내 위장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일본으로부터 비밀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름은 ‘엄경철’과 ‘엄광철’로 달라도 같은 인물로 추정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10월 SCM서 구체적 부속서 서명”(9/18)

-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 및 2015년으로 늦춰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12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이 2015년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 “10월 8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김태영 한국 국방장관이 SCM을 위해 만날 때 (이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부속서들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부속서 내용에 대해 “우리가 북한 내에서 및 역내에서 보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우발사태들(contingencies)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을 개발하겠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했던 것에 대한 다양한 구체사항들을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언



급,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훈련은 이런 종류의 우발사태에 대한 훈련이 될 것이며, 한국은 2015년까지 전쟁수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입하고 조직하고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2015년으로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10월 SCM 때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음.

● 샤프 “美, 한·미·일 미사일방어 향상 추진” (9/17)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6일 “우리는 한·미·일 3국이 지역적인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갖기 위해 좀 더 나은 조화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샤프 사령관은 한반도 안보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기대되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국이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들을 구매했으며 향후 수년간에 걸쳐 추가 구매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군(체제)과 연결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휘·통제시스템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이 2척의 이지스 함을 갖고 있으며, 1척은 건조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하면서 “그들(한국)은 그런(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런 언급은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 백악관에 제출한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BMD 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나선데 이은 것으로, 한국의 BMD 참여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샤프 사령관은 또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서울 공격 가능성과 관련, “북한은 무기나 탄약을 이동하지 않고 서울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장사정(포) 시스템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우려했음. 그는 한미 양국군은 전시 장사정포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기 위해 노력중이라면서도 “현실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포들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그들(북한)이 (장사정포에 의한 서울 공격을) 선택한다면 많은 파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침공에 대응할 연합군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의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특이한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2011년 EEZ내 조업규모 확정(9/19)

- 우리나라 어선의 2011년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척수는 1천600척, 어획할당량은 6만4천t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농림수산식



품부가 밝혔음. 한국과 중국은 최근 제주에서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중국어선의 우리측 EEZ내 조업규모는 입어척수는 1천700척, 어획할당량은 6만5천t으로 제한하기로 했음.

- 농식품부는 “2011년 중국어선의 조업규모는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어업에서 30척, 우리측과 어구분쟁이 많은 자망어업에서 20척이 줄어든 것이어서 수산자원 회복 및 양국 어업인간 분쟁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중인 ‘어구실명제’를 2012년부터 중국의 자망어업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그물의 길이를 제한하는 어구사용량 제한제 역시 조속히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 아울러 중국 어선의 어획량 허위보고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를 운영하고, 중국 어선가운데 자동위성항법장치(GPS)를 보유한 어선의 항적기록을 보존한다는데도 합의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허가조업, 폭력저항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중대한 위반어선은 내년부터 3년간 어업허가를 제한하고 상대국 지도선에 인계하기로 양국은 합의했음.

다. 한·일 관계

● <도쿄 한복판서 한·일 축제한마당 열린다>(9/19)

-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행사인 ‘한·일 축제 한마당’이 내달 2일 도쿄 한복판에서 열릴 예정임. 롯폰기(六本木)힐스 아레나(원형극장)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차이를 즐기고, 가까움을 누리자-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100년’임.
- 본 행사에 앞서 1일 오후 6시30분부터는 도쿄 시내 호텔 오타니에서 전야제가 개최될 예정임. 1일 전야제와 2일 행사에는 일본의 왕실관계자와 전직 총리, 이상득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2만~3만명이 참가·관람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에서도 내달 2, 3일에 축제 한마당이 벌어져 한국과 일본의 전통예능 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임. 서울 행사는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릴 예정임. 이 행사는 200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됐음. 매년 서울에서만 열리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도쿄에서도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지난해 도쿄 첫 행사에선 롯폰기힐스의 본 행사 외에도 오모테산도(表參道)에서 시내 거리 행진이 열리는 등 총 14만명이 참가·관람했지만 올해는 서울 행사에 중점을 두고자 도쿄 행사의 규모를 줄였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한·일 축제한마당 실행위원장은 일본 최대 광고 기업인 (주)덴쓰(電通)의 나리타 유타카(成田豊)



명예상담역이 맡았고, 운영위원장은 조세영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담당했음.

- 권철현 주일 대사는 “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축제 한마당을 여는 데 대해 고민했지만 문화·교류 행사를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이와 재일동포의 참여에 중점을 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음.

● 韓日, FTA 협상재개 국장급 첫 협의(9/17)

- 한·일 양국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국장급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음. 이번 협의는 지난 5월2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회의를 고위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처음 개최된 것임.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및 비관세장벽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선 김해용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 일본측에선 야기 타케시 외무성 경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 “日, 내달 궁내청도서 인도 통보할듯” <외교관계자>(9/16)

- 일본이 한국에 돌려주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 소유 한반도 도서’를 궁내청 보관 도서로 한정하겠다는 뜻을 내달 통보해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민간단체는 “일본 몇 권이나 돌려줄까라는 데 연연해 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한일 외교 고위 관계자는 16일 언론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인도 도서를) 궁내청 보관 도서에 국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이 10월에 외교통상부에 이같은 내용의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도하겠다”고 밝힌 데에도 대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달 10일 한국강제병합 100년 사죄 담화에서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도서’를 인도하겠다고 밝힌 이래 한국에서는 궁내청 뿐만 아니라 일본 국·공립 도서관 등에 있는 문화재도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음. 하지만 일본측이 반환 대상을 궁내청 도서로 한정할 경우 조선왕실의궤 외에 제실도서와 경연 등을 추가로 돌려주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조선왕실의궤 환수위 사무처장인 해문 스님은 “제실도서는 한국에 20만권이나 있다”며 “문화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만큼 한국 정부가 문화재의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을 체결한 이후 단 한번도 일본에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사실 이번에도 일본에 조선왕실의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이지 않았느냐. 한국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일본이 책을 몇 권이나 돌려줄까라는 데 연연해 하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라. 미·중 관계

● 美·中 위안화 갈등..무역분쟁 재연(9/17)

- 중·미간에 무역분쟁이 재연되고 있다고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가 17일 보도했음. 양국이 최근 위안화 환율 절상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철강과 전자결제 분야의 불공정을 문제삼으면서 무역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번 WTO 제소도 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음.
- 실제 미국내에서는 의회와 재계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으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베타 오바마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올 상반기에도 이런 위안화 환율 갈등으로 미중간에 무역분쟁이 초래됐으나 5월 미중전략경제대화를 계기로 해소됐었음. 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미국산 강관에 반(反) 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중국이 4년전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도 중국인들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의 경우 중국의 '인련(銀聯)카드(China Union Pay)'에 독점적 지위를 주고 있어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는 WTO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치이고 전자결제 분야의 시장 개방은 시기상조라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경제문제를 정치이슈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관영 차이나데일리 미 정부가 이번에 중국을 WTO에 제소한 시점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 출두 시기와 겹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중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휘젠귀 원장은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피하려면 미국은 보복조치를 삼가야 한다"며 "특히 미국이 이런 대결적인 자세를 지속할 경우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베이징 소재 카네기 아시아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중국경제를 전공하는 마이클 페트스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오바마 행정부가 위안화 환율 절상과 관



련해 희망이 없다고 보고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미중 양자무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그는 그러면서 “미중 간 이런 무역갈등은 내년에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음.

● 中, 美의 환율 절상 압력에 반박(9/16)

- 중국 정부는 미국의 위안화 환율의 평가 절상 압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환율 절상 압력과 관련, “압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은 “위안화 절상으로는 중미간 무역 적자 문제와 미국 국내의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중 양국간 경제무역은 호혜 공영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제무역 문제는 양국이 평등한 협상을 통해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에서는 15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위안화 평가 절상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환율 절상 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장 대변인은 “중국은 6월 이래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과 국내 상황에 근거해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런 개혁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환율의 탄력성을 정상화시키고 환율을 동태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中상무부 “대규모 방미구매단 파견”(9/16)

-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세차례 대규모 구매단을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6일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음.
- 야오 대변인은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왕차오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50명의 기업인이 포함된 방미 구매단이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방미 구매단은 에너지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 상담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건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두 차례 더 구매단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의 이런 조치는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우회 대응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실제 미국에서는 현지시간으로 15일 미 하원세입세출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을 겨냥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시점에 중국 상무부가 방중 구매단 파견을 밝힌 건 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됨.
-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와 재계를 중심으로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해 중국산 제조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반면 미국에서는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벉락 오바마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



하고 있음. 그러나 야오 대변인은 “그런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중국국은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호주와 일본, 한국에는 무역적자 규모가 크다”면서 “위안화 환율 등의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아인혼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 방중 연기(9/14)

-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조정관의 이번주 중국 방문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13일 전해졌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인혼 조정관의 (중국) 여행이 중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면서 “그의 중국 여행 계획을 이번 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중국 측이 방문 연기를 요청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음.
- 이와 관련,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아인혼 조정관의 방중 연기 요청이 북한의 최근 ‘유화 공세’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이번 주에 아인혼이 중국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아인혼 조정관의 방중은 빨라도 추석이 끝난 뒤인 이달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마. 미·일 관계

● 中 만주사변 기념일 전국서 反日시위(9/16)

-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으로 중국에서 반일(反日)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만주사미국과 일본이 유엔총회 기간인 오는 23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23일로 예정된 유엔총회의 일반토론 연설 기회를 이용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협의중임.
- 간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미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아시아 지역 등에서 양국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임.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내 이전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역의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는데 미국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바. 중·일 관계

● 日 보수언론 “중국 反日시위는 관제”(9/19)

- 일본의 일부 보수 언론은 지난 18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만주사변 79주년 기념일을 맞아 벌어졌던 반일 시위를 ‘관제데모’라



고 비판했음.

-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은 19일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 부근 등지에서 18일 있었던 반일 시위는 시간과 구호, 행진코스 등을 모두 경찰이 관리했다”면서 “국민의 불만을 분출시키기 위한 관제 데모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시위가 끝난 오후에는 시내에서 경찰 간부 등이 악수하며 계획대로 비판의 화살이 정부에 전가되지 않도록 시위의 과격화를 방지한 것을 자축하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센카쿠 제도의 일본 영해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사건을 둘러싸고 민중의 시위를 일부 허용했다”면서 “이는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일치된 분노를 일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했음. 이 신문은 “베이징이라는 정치도시에서 민중의 분노를 직접 보여준 것은 일본에 대한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라면서 “일중 관계 악화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정권을 흔들어 놓으면 일본 정부가 구속한 선장을 석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음. 이 신문은 또 “중국이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건강용품 업체인 바오젠사 직원 1만명의 일본 여행을 중단시킨 것은 이를 통해 일본의 주권행사인 ‘범 집행’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시위에서는 당국이 일정 정도의 항의행동을 허용했지만 통제불능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각지에서 항일 시위가 줄을 이었지만 당국이 전례 없이 엄격한 경비태세로 시위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2005년에 있었던 과격 반일 시위의 재연을 억제했다”고 평가했음.
- 이 신문은 그러나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그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시위 참가자들의 다수가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인 만큼 당국으로서는 반일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변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보도했음.

● 中 만주사변 기념일 전국서 反日시위(9/18)

-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으로 중국에서 반일(反日)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만주사변(9.18 사변) 79주년 기념일인 18일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반일(反日) 시위가 잇따랐음. 베이징 시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께부터 창안제(長安街) 인근 주중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의 반환과 구속된 중국 어선 선장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음.
- 학생과 청년, 노인, 여성 등이 모두 포함된 100여명의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다오위다오에서 물러가라”, “류큐(琉球.오키나와)는 중국 땅”, “9.18을 제대로 기억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 대사관을 출발, 반경 2~3km를 2시간 이상 행진하며 강한 반일 감정을 표출했음. 일부 참가자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외쳤고 한 참가자는 다오위다오와 오성홍기 등 모양의 장식을 얹은 케이크를 들고 시위에 참가했음. 이번 시위는 ‘중국민간 다오위다오 보호 연합회’(中國民間保釣連合會) 등 민족주의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음.

- 시위 과정에서 일부 중국인 남성들이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다 중국 공안에 연행돼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특별한 폭력 사태나 불상사로 번지지 않았음. 중국 공안 수백명은 이날 일본 대사관 앞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그리스 대사관 등 인근 외국 공관의 시설 경비도 대폭 강화했음. 상하이와 선양, 선전, 홍콩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일 시위가 잇따랐음.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수십명의 시민들이 “중국 땅인 다오위다오를 돌려달라”, “어선나포는 불법이다”, “구속된 선장을 즉각 석방하라”, “중국인이여 일어나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일본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음.
- 광둥(廣東)성의 선전시에서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중국 국가를 부르며 반일 감정을 표출했으며 광저우(廣州)시에서는 일본 총영사관 등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졌음. 홍콩에서는 다오위다오 보호연맹을 포함한 민간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후 통튀완에 모여 일본 총영사관 앞까지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이며 일본 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음.
- 이밖에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각 지역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만주 침략과 중국 어선 나포에 항의하는 반일 시위를 벌였음.
- 만주사변은 일본군이 1931년 9월 18일 선양 류타오거우의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 군벌 장쉐량(張學良) 군대의 소행이라고 규정, 만주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에 나선 사건을 말함. 만주사변이란 국치일을 잊지말자는 뜻에서 전국적인 기념행사가 거행된 가운데 반일 시위마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중국 및 중화권에 서의 반일 감정은 유례없이 격화되고 있음.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 기업은 자칫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신변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만주사변 기념일을 전후해 중국 네티즌과 해커들의 일본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음. 최근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는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접속이 되지 않았고 가나자와(金澤)대 부속고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중국어 페이지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일본 측은 이같은 문제가 중국 해커들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 中 나포사건 계기 해상감시 강화(9/18)

- 중국 정부가 일본의 자국 어선 나포 사건을 계기로 인근 해역에서의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중국 외교부는 17일 장위(姜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려 “최근 중국이 해상감독선을 우리와 관련한 해역에 파견, 법 집행 활동을 강화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유관 당국은 어업지도선도 유관 해역에 파견, 순찰을 통해 어선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해상감시 강화 조치는 지난 7일 동중국해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의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일본의 자국 어선 나포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과 또 다른 갈등을 빚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의 수위를 높였음. 장 대변인은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에 장비 반입했다는 일본 측 주장과 관련, 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춘샤오 가스전은 중국이 주권과 관할권을 가진 곳으로 이곳에서의 활동은 명백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외무상은 17일 “중국 작업선이 시라카바 가스전에 굴착 작업용 드릴로 추정되는 장비를 반입했다”며 약속을 위반한 중국의 단독 작업 개시에 우려를 나타냈음. 중·일 양국이 각자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걸쳐 있어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춘샤오 가스전은 중국이 먼저 개발에 들어갔으나 양국이 협상을 통해 공동개발기로 한 바 있음.

● 中·日, 센카쿠 갈등 이어 가스전 두고 신경전(9/17)

-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웠음. 일본 민주당 간사장으로 내정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작업선이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에 굴착 작업용 드릴로 추정되는 장비를 반입했다”며 중국의 단독 작업 개시를 우려했음.
- 시라카바 가스전은 중·일 양국이 각자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걸쳐 있어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임. 중국이 먼저 개발에 들어가자 일본이 반발해 2008년 6월 양국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공동 개발 조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동안 중국측의 굴착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음.
- 하지만 중국은 최근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부딪힌 끝에 선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가스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굴착 장비를 반입하자 일본은 ‘중국이 약속을 깨고 단독으로 가스전을 개발하



려는 것 아니냐'고 펄쩍 뛴 것임. 중국측은 일본측의 문의에 대해 “수리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다 외상은 “굴착 작업을 시작하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강하게 기대한다”고 견제구를 던졌음.

● ‘釣魚島 갈등’ 심화..“중화권 총궐기”(9/16)

-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당국의 중국어선 나포를 계기로 촉발된 중·일간 갈등이 중화권은 물론 해외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거센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확산하고 있음.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만주사변(중국명 9.18사변) 발생 79주년인 오는 18일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의 시민단체인 ‘중국민간 다오위다오 보호 연합회’(中國民間保釣連合會)는 18일 베이징(北京)의 르탄(日壇) 공원 등에 집결, 집회를 가진 뒤 주중 일본대사관까지 대규모 항의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16일 일본의 아시히신문을 인용해 보도했음. 홍콩과 대만의 민족주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18일 유사한 성격의 반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화교들도 18일 오후 1시부터 현지에서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와 만주침략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문회보(文匯報)가 보도했음.
- 아울러 중국 최대 해커조직인 증귀홍커(中國紅客)연맹이 18일을 기해 일본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18일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의 온.오프라인상의 대규모 반일 시위가 펼쳐질 전망이다. ‘다오위다오 보호 홍콩 행동위원회’(香港保釣行動委員會)도 15일 “다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접근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만 대신 홍콩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다오위다오에 접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앞서 홍콩 행동위원회측은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대만에서 배를 타고 다오위다오 해역으로 향하려고 했으나 대만 당국의 제지로 다오위다오 접근에 실패했음. 그러나 홍콩 위생당국이 홍콩 행동위원회측이 다오위다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하기로 한 ‘카이펑 2호’에 대한 설치류 위생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배의 출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블로그에 일본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글들을 잇달아 올리면서 심각한 반일 감정을 드러냈고 일부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선동적인 글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일본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음.



- 주중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에 통지문을 올려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음. 일본대사관은 9.18사변 79주년이란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 광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할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 중국인과 접촉시 말이나 태도에 주의하며 ▲ 눈에 띄는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 대사관과 외무성의 위험정보를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당부했음.
- 중국은 지난 14일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를 다시 외교부로 불러 일본에 억류 중인 중국인 선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동안 무려 5차례에 걸쳐 주중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표시했음.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이달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추진돼 오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의 총리회담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日, 나포 中어선 선원 14명 석방(9/13)

- 일본 정부가 13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의 선원 14명을 석방했음. 그러나 일본 검찰에 송치된 어선 선장은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센카쿠 열도 구바지마 인근 해상에서 자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어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음.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14명의 선원은 이날 중국이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보낸 항공기를 타고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를 떠났으며, 나포된 어선은 이 비행기를 타고 온 중국 측 선원이 본국까지 운항해 갈 예정임. 중국 정부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을 모두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법원은 19일까지 선장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금 기간을 연장했음.
-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와 관련해 양국이 날카롭게 맞서는 가운데 외교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음. 중국 외교부는 12일 성명에서 일본이 수집한 자료가 불법적이고 근거 없다고 비난한 뒤 “일본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즉각 선원과 선박을 석방하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날 새벽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음. 나포 사건 후 니와 대사가 중국 간부들에 불러가 항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국무위원이 직접 초치한 것은 이례적임.
- 일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그렇게 늦은 시간에 니와 대사를 부른 데 유감스럽다”며 불쾌한 심



기를 드러내면서 일본은 선장을 당장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 았음. 센코쿠 장관은 또 중국 측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동중 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협상을 연기한 데 대해서도 “두 사안은 별개 의 문제다.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도록 중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 했음.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일본 국내법에 따라 범죄 사건으로 다 료 것”이라고 덧붙였음.

● 中-日 다오위다오 분쟁 현장검증도 ‘신경전’(9/13)

- 일본이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근해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장검증’ 문제를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였음. 신화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12일 나포 선박에 중국인 선원 14명을 태운 채 바다로 나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재연하도록 했음.
-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에 의해 수집된 어떤 증거도 불법적이며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즉각 선원과 선박을 석방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음. 아울러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잔치슝(詹其雄.41) 선장과 억류된 선원들을 면담했음.
- 한편 일본은 중국이 선박 나포 문제를 구실로 이달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협상을 연기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음. 한 일본 외무성 관리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화 연기를 선언해 유감”이라고 말했음.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7일 센가쿠 열도 인근 해상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잔 선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형 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